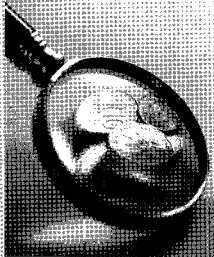




산업동향



- IMF, "유가 쇼크 일시 현상 그칠 것"
- 기업 59% "원자재가 상승분 반영 못해"
- 中企 "네트워크형 협력으로 활로 찾아야"
- 中企 경기전망지수 4개월째 하락
- '中企 흡소핑' 대기업 참여 제한해야
- 가격담합 가전3사 첫 납품제재
- "물가상승세 전반적으로 확산"
- 국내 특허등록 100만건 달성... 세계 4번째
- "中企 업종별 경쟁력 강화 앞장"
- 449억弗로 전년 동월比 46% 증가...무역흑자는 30억弗
- 수출中企 62%, '원자재가 상승' 애로
- 성공 비즈니스의 시작 비즈니스지원단과 함께
- SSM 규제법 개정 후 SSM 출점↓ 사업조정 타결↑

IMF, “유가 쇼크 일시 현상 그칠 것”

○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의 정정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세계경제 성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

- IMF는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정 불안을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설명하며 유가 강세가 계속될 경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 인도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26일 Reuter)

○ 단, 현재의 급격한 시장가격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리비아 사태만으로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의 추가 증산 여력이 반정부 시위 발발 국가들의 석유 생산 차질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고 덧붙임

기업 59% “원자재가 상승분 반영 못해”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자금 지원확대,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정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50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애로 실태’

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9.4%가 최근 원자재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영치 못한 이유로는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매출부진 우려(52.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계약상의 이유(23.3%), 담합조사 등에 따른 부담감(19.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품가에 반영했다고 답한 기업은 40.6%였으며, 반영 정도는 원자재가 상승분의 10% 미만(2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20% 미만(19.5%), 20~30% 미만(16.6%), 30~40% 미만(14.1%), 40~50% 미만(9.3%)으로 나타나 반영비율이 원자재가 상승분의 50%에 못 미친다고 답한 기업이 81.5%에 달했다.

원자재가 급등으로 기업경영에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가 다소 있다’가 62.6%,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응답이 30.5%로 집계돼 전체 응답기업의 93.1%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형태는 원가부담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65.6%),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부진(15.3%), 임금 등 다른 부문에서의 원가절감(13.8%) 등이었다.

향후 원자재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6.7%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것’과 ‘점차 하락할 것’이란 답은 각각 11.7%, 1.6%에 그쳤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2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입관세 인하(24%), 기업의 원가상승요인 고려한 물가대책(16.8%), 해외자원 개발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7.7%), 정부 비축물량 공급확대(7%)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임금동결과 같

은 원가절감이나 제품가격 인상 외에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와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비축물량 확대, 유통부문 비효율성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 “네트워크형 협력으로 활로 찾아야”

네트워크형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보고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네트워크형 협력’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와 과거 지원정책의 성과를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독려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대기업과의 협력과 해외진출 기회 포착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협력뿐 아니라, 중소기업 동종 또는 이(異) 업종 간 수평적 협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형 협력은 대기업 등 원청기업에 의존하는 하청관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평적인 거래관계로 기술, 인력 및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조정 역할을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코디네이터형’과 일의 성격에 따라 코디네이터 기업을 공동적으로 변경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분되는데,

네트워크형 협력의 범위는 동일 업종 내의 협력과 다른 업종 기업과의 협력으로 구분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성장해 온 일본 중소기업이 하청관계를 탈피해 자립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가 확대한 것”을 사례로 들며 “국내는 중소기업 간 협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한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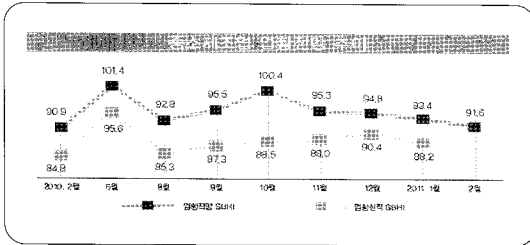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김 수석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내에 협력 코디네이터 기업군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네트워크의 응집력 제고를 위한 신뢰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형 협력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러 법률 및 부처들에 산재되어 있는 협업 관련 지원 근거와 제도를 통합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중소 경기전망지수 4개월째 하락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중소기업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소 제조업체 1천4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결과 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91.6으로 전월 93.4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중소 흡소핑’ 대기업 참여 제한해야

중소기업 전용 흡소핑 채널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정 후 대기업으로의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1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 흡소핑이 대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 흡소핑 구성주주의 지분 처분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세부심사안을 정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대기업의 이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대기업으로 매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도 “중기 흡소핑 주식의 양도 대상업체를 공공단체 등으로 한정하는 등 구체적인 매각 금지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특히 “과거 우리흡소핑(현 롯데흡소핑) 사례를 참고해 보면 정관변경, 승인 등에 지분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중기 흡소핑에 참여하는 기존 주주에게 매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에 따른 경영부담과 한파, 구제역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 95.3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한 셈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89.7)이 0.7 포인트로 소폭 하락했으나 중기업(95.4)은 전월대비 4.3포인트나 떨어졌다. 공업구조별로는 경공업(90.9)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나 중화학공업(91.9)은 하락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제조업(90.3), 혁신형 제조업(96.1)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가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식료품 등 12개 업종에서 지수 하락 현상이 나타났고 기타제품, 섬유제품 등 6개 업종에서 상승했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생산, 내수판매, 경상이익, 자금사정, 원자재조달사정은 하락했으나 수출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1월 중소제조업 업황실적은 전월 90.4보다 2.2 포인트 하락한 88.2로 지난 9월 이후 5개월만에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 중기업 모두 하락했으며 기업유형별로도 일반제조업, 혁신형제조업 모두 하락했다. 1월중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원자재가격상승(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내수부진(50.4%), 업체간 과당경쟁(36.4%), 인건비 상승(31.6%) 등을 꼽았다.

토론자들은 또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금지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고 △우대주주 지분율을 현재 70%보다 늘리거나 7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과 방송편성시 기준(80%)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을 취급하는 편성방안에 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방통위는 중소기업전용 흡소핑 승인 심사계획을 2월중 의결하고 늦어도 3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대안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데도 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조달청이 이들 가전업체와 거래를 중지하더라도 별도 법인인 가전 대리점들이 얼마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LG전자에 과징금(350억원)을 100%, 두번째 신고한 삼성전자에 50%를 각각 면제했지만 조달청은 3사 모두에 같은 처분을 했다.

가격담합 가전3사 첫 납품제재

조달청이 조달단가를 담합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표적 가전회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납품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달청은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TV와 에어컨의 납품 단가를 담합한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3개월간 모든 공공기관 납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공공 소포물)의 '연간조달단가계약'을 맺으면서 단가를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러나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3개월에 그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가전시장을 이들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다른

“물가상승세 전반적으로 확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의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실물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최근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1월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의 가격 상승세가 확대됐으며 그동안 안정적이던 서비스물가도 전월보다 상승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월(3.5%)보다 높은 4.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개도국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실물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도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흥시장국의 물가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전월보다 둔화됐으나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 임금 상승 등에 따라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KDI는 국제금융시장은 신흥시장국의 금리 인상에도 전반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가능성도 완화되면서 주요 변동성 지표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특허등록 100만건 달성... 세계 4번째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난해 12월3일자로 국내 특허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1948년 ‘유화염료제조법’이 제1호 특허로 등록된 이후 62년만에 거둔 성과로 미국(1911년), 캐나다(1976년), 일본(1982년)에 이어 세계 4번째로 ‘특허등록 100만호’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

국가는 아니지만 EPO(유럽특허청)도 지난해말 특허등록 100만건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 100만건 달성 기간으로 보면 미국 75년, 일본 97년 등 종전 기록에 비해 가장 앞섰다.

국내 특허 100만번째 등록의 주인공은 휴대전화 힌지(hinge, 외장을 이어주는 경첩 장치) 제조업체

인 (주)다이아벨(대표 김삼중)이 차지했다.

그간의 특허등록 추이를 보면 특허 100만건 가운데 IT산업이 급성장한 최근 10년(2001~2010년)새 69만여건이 등록되며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또 2000년대 이후 IT분야 민간기업들의 R&D 투자액이 연평균 12% 이상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 분야의 특허등록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양적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수특허 비율 등 질적성장을 꾀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국내 특허출원을 선도해온 민간 대기업에서는 이미 양보다 질 중심으로 특허전략을 수정했고, 특허청도 ‘빠른 심사’ 보다는 ‘고품질 심사’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까지 가파르게 성장하던 국내 특허는 이후 3년 연속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최대순 과장은 “20세기에 특허제도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 100만건을 경험하게 됐다”며 “고품질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날 특허등록 100만건 축하행사를 갖고 다이아벨에 순금등록증 모형 등을 전달했다.

“중소 업종별 경쟁력 강화 앞장”

중소기업 품격 향상과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벗고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일 개최한 시무식에서 올해 중앙회 기본운영방향을 업종별 경쟁력 강화로 꼽고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10대 과제로는 우선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분야별 현장애로 발굴과 맞춤형 정책 개발 △글로벌 스톱자이언츠 육성기반 조성 △서민형업종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 확산 △中企 사회적 책임 확대와 품격제고에 나선다.

협동조합 부문에서는 업종별 리더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 밀착지원을 통한 질적성장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의 조달시장 및 정부사업 참여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맞춤형 현장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개별 기업범위를 넘어 업종성격이 유사한 연관업종의 경영 애로사항 발굴에 나서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기업 평가모형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한국형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스몰자이언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 30명 내외로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스톱자이언츠 선정 및 인증을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투명경영 환경구축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자율회계 기준지침을 마련 공표하며 탈세 및 잘못된 회계관행 사례 등을 발굴해 중소기업 품격 향상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서민형 업종 경쟁력 제고 및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SSM 규제관련 지자체 표준조례 제정, 효

과점검과 실태조사에 나서고 서민형 금융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판로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 확대도 추진된다. 우선 지난해 위촉한 11개국 17명의 해외민간대사를 확대하고 주한외국공관 네트워크를 강화해 5월중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투자유치제도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확대를 위해 64개 업종별 단체 등의 전시회, 시장개척단, 글로벌전략 품목 수출컨소시엄 지원에 나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대책 모니터링과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이행점검단이 운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자율적인 사업이양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대응전략과 해외 환경규제 등 정보제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협동조합 현장 밀착지원도 강화된다.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 애로개선 및 운영 지원에 나서고 코업비즈 조합참여 확대, 협동조합 전용 기술개발사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수행역량 강화,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서비스 등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또, 협동조합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구매지원 제도 실효성 개선,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공공구매정보망 발전방안 연구, 공공조달 이행보증 부담 완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사업의 조기 정착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외국인력 활용 원활화 및 안정

적 운영기반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449억弗로 전년 동월比 46% 증가... 무역흑자는 30억弗

올 1월 수출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448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다. 이는 종전의 사상 최대치인 2010년 12월의 441억 45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1월의 수입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9% 증가한 419억 3000만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9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

1월의 무역흑자는 2007년 1월 이후 4년만의 기록이다. 그동안 1월의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08년 40억 달러, 2009년 38억 달러, 2010년 8억 달러 각각 적자였다.

산업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선박이 전년 동기대비 279% 증가해 최고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일반기계(56.6%), 자동차(50.7%), 자동차부품(34.4%), 반도체(23%) 등이 이었다.

한편 2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1월 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중企 62%, '원자재가 상승' 애로

수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원자재 가격 안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1년 상반기 환율 및 수출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변동'(61.8%)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서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50.9%, '세계경제 불안 및 경기둔화' 33.6%를 들어 수출 중소기업들이 최근의 원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해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안정'(57.1%)을 꼽았다. '안정적 환율 운용'(41.1%), '해외마케팅사업 지원'(38.4%), '수출금융 지원 확대'(33.0%)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은 올 상반기 수출물량이 작년보다 '증가(47.7%)' 내지는 '비슷(39.5%)'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감소' 할 것이라는 응답은 12.9%에 불과해 대부분 기업들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환율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88.4%의 중소기업이 수출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25.0%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수출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환율수준은 달러 1165.3원, 중국 위안화 164.5원, 유로화 1494.9원, 엔화 1231.3원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최근과 같이 환율이 적정수준 이하

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수출 물량이 증가해도 이익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환율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67.0%가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중소기업이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시중은행 담당자와 환율상담'을 하는 경우가 26.9%, '수출계약시 대금결제일 조정' 18.5%, '시중은행,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등의 파생상품을 이용해 환리스크 관리' 15.7%, '결제통화 다변화' 14.8% 등으로 나타났다. '환위험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업체는 28.7%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통상진흥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가격변동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 기업 범위와 부보가능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공 비즈니스의 시작 비즈니스지원단과 함께

중소기업은 기업경영에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도 있겠지만 컨설턴트 고용비용은 중소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고민상담 및 애로해소를 위하여 '09년 3월 각 지방중소기업청

(서울, 경기 등 전국 11개)에 "비즈니스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경영에 필요한 11개 분야에 해당 전문가(법무사, 노무사 등)를 배치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해당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현장클리닉"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지원단 분야 : 창업/벤처, 법무/규제, 금융/환위험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일반, 구인/구직, 기술/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마케팅/수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신청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는 국번없이 1357, 인터넷 상담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http://link.bizinfo.go.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현장클리닉은 기업요청시, 혹은 상담 후 전문위원이 추천하여 이루어지는데, 해당기업의 부족한 분야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09년 3월 처음 개설된 비즈니스지원단은 현재까지 전국 20만 건이 넘는 중소기업의 고민을 상담, 자문하였으며, 그 중 서울지역은 현장 클리닉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결과 전국 4,121건 중 734건(18%)의 현장클리닉을 수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앞으로 비즈니스지원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업애로를 상담하는 전문위원의 선정 자격 및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담 및 현장클리닉 우수사례를 기업에 전파하여 제도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문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정종범 주무관 (02-509-6753)

SSM 규제법 개정 후 SSM 출점↓ 사업조정 타결↑

'10.12월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시행 2개월여만에 SSM 출점 및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조정 타결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법 개정('10.11.24일 공포)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SSM 등록제한 또는 조건부여

* 상생법 개정('10.12.07일 공포) : 대기업이 개점비용을 51%이상 부담하는 SSM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에 따르면 '10.12월(SSM 규제법 개정·시행)부터 금년 2.10일까지 2개월여동안 SSM 출점수가 종전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크게 감소되었고,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되었으며

* SSM 월평균 출점수(건) : ('09.7~12) 19 → ('10.1~11) 13 → ('10.12~2.10) 6

* SSM 월평균 사업조정신청(건) : ('09.7~12) 20 → ('10.1~11) 10 → ('10.12~2.10) 8

또한 사업조정 타결 실적은 2개월여간 총 31건으로 월 10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났다.

* SSM 월평균 사업조정타결(건) : ('09.7~12) 4 → ('10.1~11) 10 → ('10.12~2.10) 16

사업조정 타결 건(31건)중에는 SSM 품목제한, 영업시간 단축,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영업개시를 중소상인과 대기업이 합의 타결한 건(8건) 뿐만 아니라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 자체를 철회한 건(11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법개정 시행의 취지와 최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

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대기업)별 SSM 사업조정 처리 실적〉

한편, 상생법 개정으로 위탁형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개월여간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 총 7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대기업에서 인근 수퍼 상인과 합의를 통해 순수 가맹점(대기업 개점비용 51% 미만)을 개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적인 조정문화 확산을 통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중소소매업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 김진수(042-481-4367)

